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전면 반대 성명서 채택

의안 번호	120
----------	-----

발의연월일 : 2019년 5월 16일

대표발의자 : 전수일 의원

발의자 : 장문혁, 이주웅,
박찬원, 지광천,
심현정, 이명순 의원

1. 제안이유

가. 환경부에서 오는 2021년도부터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전면 시행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평창군의회는 의회 의결을 얻어 성명서를 발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10년간 유예되었다가 오는 2021년부터 전문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강수계 수질개선 관리의 중요성은 공감하나 이를 구실로 평창군에 개발제한을 가해온 것 또한 사실임
- 다. 하지만 실질적인 오염원 제공자는 수도권 인접지역임에도 수질보전의 책임을 지는 것은 역차별에 해당함
- 라. 이에, 정부는 한강상류 주민과 서울 및 수도권 주민이 함께 수궁할 수 있는 환경정책을 입안해야 함
- 마. 평창군의회는 5만 군민의 행복추구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수질오염총량제의 전면 실시를 반대할 것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전면 반대 성 명 서

하천의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하천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인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한강수계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시행토록 하는 내용의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0년 5월에 공포된 지 9년의 세월이 흘렀다.

당초 이 법률은 한강수계 상류인 강원도와 충북 일부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그 시행이 10년간 유예 되었으며 오는 2021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될 상황에 이르렀다.

한강수계는 2천 3백만 수도권 시민의 젖줄로서 무엇보다도 청정한 수질의 유지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평창군민도 공감하는 사항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환경정책을 면밀히 살펴보면 수도권 주민의 맑고 깨끗한 상수원 확보라는 대 전제를 구실로 우리군을 비롯한 한강 상류 지역에 유·무형의 보이지 않는 개발제한을 가해온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다.

한강수계인 경기도 팔당댐 유역의 위락시설, 펜션, 모텔, 공장 등의 허가 건수를 비교해도 정작 한강수계의 실질적인 오염원 제공자는 한강 상류 지역이 아닌 수도권 인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상류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수질보전의 책임을 부담해야하는 역차별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그동안의 환경정책 패러다임을 새롭게 전환해 청정 수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온갖 희생을 묵묵히 감수하고 있는 한강 상류지역 주민과 2천 3백만 수도권 주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획기적인 환경정책을 입안해 주기를 우리 군민은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나아가 환경보전도 중요하지만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군민의 행복추구권 또한 수도권 주민과 비교해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정부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평창군의회에서는 지금보다 더욱 많은 환경 인프라 예산이 투입되어 보전과 개발이라는 상반된 가치가 병행되고, 개발을 통한 5만 평창군민의 행복추구권이 충분히 보장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수질오염 총량제의 전면 실시를 반대할 것임을 다시한번 천명하는 바이다.

2019년 5월 17일

평창군의회 의원 일동